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4/ 11/ 6 통권 1700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중소기업 리스크 인식을 위한 실무적 Tips
- 한번에 해결하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및 일부 환원
-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 2까지 신청
- 감사인 지정결과 등 조회방법 안내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후 포괄양수도로 고
용승계된 경우는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 안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외부회계감사기간중 독립성 침해되어 금지되는 비감사업무 유형〉

개념구분	독립성위배로 불가능한 구체적 업무내용
회계·경리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처리 자문(세무조정은 가능)
재무제표작성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주식사향 작성 등(피감회사의 경영진 책임업무임)
IFRS 변환	일반기업회계기준 감사내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변환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감사기업에 모기업 위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 등	기업의 내부감사업무대행, 내부감사직 취임 등
재무정보 자문	재무정보 체계의 설계, 구축, 운영시스템 개발
매도매수자문	자본·자산·기타 회사권리를 매도·매수하는 자문업무 등
인사·조직 등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자문업무, 인력채용 대행업무
보험충당부채	재무제표에 계상반영되는 보험충당부채 산정, 보험계리업무
소송자문	민사·형사 소송에 관한 자문업무, 소송안내자문 등
재무자문	자금조달, 차입, 투자알선자문, 중개업무 등
경영의사 결정	중요자산 처분양도, 지배인 선임 등, 경영의사 결정 등 임원에 준하는 직위역할업무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00호 / 주간 45호

2024. 11. 6. (수)

·발행인: 이윤선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외부회계감사기간 중 독립성 침해되어 금지되는 비감사업무 유형	표지
CEO의 경영산책	중소기업 리스크 인식을 위한 실무적 Tips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계정과목설정 관련 의견 - 지방세 안분 필요 여부에 대한 문의 - 포워딩업체에서 관세 자체 환급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한번에 해결하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IRA 내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주요 조항 -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율 비교	9 10
직장인 Survival	나의 좋은 점을 찾아보자	11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 계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소득-303, 2023.12.19) - 총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익 금불산입한 후, 실제 비용이 지출되어 총당부채와 상계되는 시점에 손 금산입(△유보)함 (사전법규법인-866, 2024.04.02)	12 13
세정뉴스와 해설	정부, 내년부터 '직원 할인'도 본격 과세... 삼성전자, 1인당 250만원 추가 부담 예상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후 포괄양수도로 고용승계된 경우는 근 로계약 종료에 해당 안됨	12
세무정보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및 일부 환원 -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2.까지 신청	15 32 37
회계정보	- 감사인 지정 결과 등 조회방법 안내	40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 정환율	48

중소기업 리스크 인식을 위한 실무적 Tips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기업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서는 리스크의 원천(sources) 탐색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리스크 원천을 정리한 후 개인별, 팀별, 부서별 목표를 정의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찾는 것이 리스크 인식이다. 일단 리스크를 찾아낸 후 수백, 수천 개의 리스크를 아무 기준 없이 열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리스크 분류 기준을 만들어 이 기준에 따라 리스크를 분류한다. 다음은 중소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리스크 분류 기준(risk library)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리스크분류기준:예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운영리스크	법적 리스크	법률, 규정 위반
		계약 위반에 따른 패널티
	IT 리스크	정보보안: 개인정보, 산업기밀
		전산시스템 운영 장애
		아웃소싱업체의 시스템 장애
	인적 리스크	채용 : 전문인력 채용 실패
		인사관리: 기술책임자의 전직
		산재사고 등에 부상/사망
	비즈니스 리스크	매출 : 주요 거래선의 부도
		수출 : 관세 및 환경 규제
		마케팅 : 시장 예측의 실패
		품질관리: 품질인증의 미준수
	환경 리스크	기후변화: 가뭄에 따른 용수부족
		환경관련 법규 및 기준 위반

비운영 리스크	재무 리스크	환율변동 리스크
		자금조달 및 운용 실패
		회계 및 세무관리 실패
	전략 리스크	경영전략 : 중장기 전략 부재
		R&D : 연구개발 전문인력 부족

리스크 분류는 유일무이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업종 또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직무 성격이 다양할수록 분류 항목이 늘어나고 조직 규모가 작거나 직무 성격이 동질적인 경우에는 분류 항목이 줄어들게 된다.

리스크의 인식

리스크 관리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개별 리스크를 찾는 것이다. 리스크 원천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리스크 인식이다. 이 개별 리스크는 그 업무의 경험이 많은 직원이 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 그 업무와 관련한 실제 리스크 사건을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리스크 사건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감독기관이나 내외부감사나 조사에서 지적사항도 개별 리스크를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필요한 경우 전사적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진단이 효과적일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간편한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 관리자 질문서 : 업무에 정통한 관리자(팀장)에게 질문서를 배부하여 자신이 담당한 조직의 리스크를 파악하여 기술하도록 함
-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 조직단위 또는 해당 업무에 정통한 직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ask force)에서 토의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리스크를 파악함.
- 워크숍(workshop) : 해당 업무에 정통한 관리자로 하여금 실무자들이 찾아낸 리스크(안) 검토 확정.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 실무 현장의 리스크 인식과 관련하여 유용한 팁(tips)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기승. 리스크 관리의 실제, 2024. 9.27. p.70. 분석 요약 인용함.

- 직원 1명이 평균 5개 내외의 리스크를 인식하며 이보다 리스크가 많으면 리스크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이보다 적으면 중요한 리스크를 찾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리스크 관리에 비협조적인 직원의 경우 향후 자신이 담당할 리스크 개수가 많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리스크 찾기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 전담부서는 이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 리스크 찾기를 위해서는 1차 방어선인 단위 조직(부서, 팀, 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해당 업무와 관련한 리스크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리스크 찾기 과정에서 업무흐름도(flowchart)의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 직무내용이 동일한 단위 조직이 다수 있는 경우(예 : 국내지점 100개, 해외지점 20개 등)에는 대표성이 높은 1개 단위 조직에서만 리스크 찾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른 유사 조직에 적용함으로써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다.
- 조직구성원이 리스크를 제대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개념,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교육이 필수적이다.
- 특정 직무와 관련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조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만일 찾아낸 리스크를 모두 적절히 관리하였음에도 조직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중요한 리스크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리스크 찾기의 중요한 원천으로 감독기관의 감사나 조사의 지적, 내부감사 부서의 감사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감사 지적사항이 리스크 사고(이벤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나 조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리스크의 사전 예방을 통해의 기업의 대내외적인 신뢰를 제고하는 동시에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계정과목설정 관련의 건

Q 생산현장에 온수탱크, 전기보일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사비 비용은 50,000,000원입니다.
계정과목설정 부분이 시설장치, 비품, 공구와기구 기타 어떻게 설정을 해야지 궁금합니다.

A 기존의 장치들에 대해 수선공사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를 한다는 것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추가 설치공사라면 시설장치 가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안분 필요 여부에 대한 문의

Q 당사는 화성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용인에 위치한 창고에 대하여 지방세 안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Case 1) 용인에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자재를 구매하여 창고에 적재하고, 출하 전 제품검사 후 출하하는 역할을 함. 18년 9월부터 21년 8월까지의 용역업체(자재검사 및 창고관리)가 창고업자로부터 창고를 임차한 후 당사에 용역 및 창고 rent, 관리 등의 계약을 함. 21년 9월 계약 갱신 시, 당사가 창고업자에게 Rent 등 직접 계약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용역업체에게는 창고 관리 및 자재 관리에 대한 용역 계약을 구분 진행함.

- 21년까지: 창고업체→용역업체 창고렌트에 대한 계약 체결, 용역업체→당사 창고렌트 및 창고 업무에 대한 계약 체결

- 21년이후: 창고업체→당사와 창고렌트에 대한 계약 체결, 용역업체→당사 창고업무에 대한 계약 체결

* 18년도 창고에 대한 인테리어 및 비품등은 당사가 구입

이 경우, 21년부터는 창고에 대한 계약을 당사가 직접 하였으므로 용인 창고에 대한 지방세 안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나, 18~20년까지 용역업체가 창고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안분이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Case 2) 당사는 물류업체를 통해 customer 창고 근처 depot 창고를 이용하고 있음. Depot 창고는 물류업체가 창고업자들과 계약하였으며, 당사는 물류업체와 Box 당 단가로 출하된 박스의

수량만큼 비용을 정산하는 형태임. Depot 창고는 당사 창고에서 출하되어 customer 창고에 입고되기 전 당사 제품을 임시로 적재해두는 용도로 사용됨. 해당 창고는 여러 업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layout이 구분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customer에게 실시간 납품하고 있음. 적재되는 박스 공간은 실시간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박스가 적재되는 공간을 산출하여 지방세 안분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1. 지방세법상 사업장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는데, 귀사가 직접 창고 등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21년부터 안분대상이라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사가 아닌 물류업체가 계약한 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귀사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만, 이 역시 과세당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포워딩업체에서 관세 자체 환급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Q

당사는 중국에서 A거래처로부터 DDP 조건으로 수입을 하였고 이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어, 세관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불량대체품 발송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A거래처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서 B포워딩업체에서 A거래처로 청구, B포워딩업체에서 당사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하여 자체적으로 환급해주겠다고 합니다. 당사에서 검토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하여 환급하는것이 타당한가요?

A

거래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한 관세를 귀사가 우선 부담하고 추후 보전받는 경우는 귀사의 의견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대납전도금 반영 후, 환급되면 대체분개해 없앱니다.

한번에 해결하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상담실 백종훈 차장

2024년도 이제 거의 저물어 가고 있는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각종 서류나 증빙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근로소득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교육비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 아동(연령 제한 없음)의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까지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된다.

하지만 근로소득자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① 미취학 아동 :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와 그 밖의 공급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② 초·중·고등학생 : 학교·외국인학교·대안학교·외국교육기관에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교재비 제외),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에 대해 교육비공제가 적용되며,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 이내의 교복구입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 ③ 대학생 : 대학교의 수업료, 입학금이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 입학 등록금도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교육비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노인대학 수강료 등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 초·중·고·대학생의 학원비, 학습지 대금,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교육비, 대학원 교육비, 입사 전 및 퇴직 후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

상이 아니며, 공제대상교육비에 지출한 금액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국외교육비 공제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은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하는데,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특히, 자녀가 외국유학 중 당해 과세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당해 과세연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제한도액 계산방법은 각 학생 신분에 해당하는 각각의 한도를 따라야 한다.

교육비공제를 위한 주의사항

- ① 인가된 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영수증의 경우는 직접 수취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교육비)’을 영수증으로 사용하면 된다.
- ② 보육료납부영수증,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영수증,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영수증,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 영수증 등은 직접 챙겨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와 함께 근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 ③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등록금을 금융기관에서 용자받아 납부하였다면(학교 졸업 후 약정에 의해 상환) 교육비를 납부한 때에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대출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④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대상이 되나, 고용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 보육수당으로 비과세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⑥ 학교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당해 등록금 및 학비상당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IRA 內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주요 조항

구분	주요 내용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배터리	(셀) 35\$/kWh, (모듈) 10\$/kWh, (소재) 생산비용의 10%
	태양광	(모듈) 7¢/W, (셀) 4¢/W, (웨이퍼) 12\$/m ² , (폴리실리콘) 3\$/kg 등
	풍력	(블레이드) 2¢/W, (나셀) 5¢/W, (타워) 3¢/W 등
	핵심광물	생산비용(인건비, 전기요금, 저장비용,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비용 등)의 10%



2025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단위 : %)

구분	당기분(기본공제)			증가분 (추가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5 → 7	10 → 12	+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 8	12 → 14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 → 10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율 비교

종합소득세율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2억원 이하	9%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3000억원 초과	24%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div> <div>법인세 납부 후 세무순익의 배당시 좌의 종합소득 적용</div> <div>← 법인세+ (추가과세)</div> </div>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판단 순서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1주택
2. 피상속인의 거주 기간이 가장 오래된 1주택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나의 좋은 점을 찾아보자

지금 나의 좋은 점을 세 가지 이상 떠올려볼 수 있는가? 긍정적인 면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 바라봐주지 않고,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고 걱정하며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단점이나 타인의 단점이 자꾸 보인다면 짜증스럽고 우울한 삶이 된다. 단점이 아닌데도 나의 부정적 해석으로 단점으로 여기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도 힘빠지게 만든다. 게다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나의 좋은 점을 99가지 적어 나에게 선물해 보자.

일을 하다가 차 한 잔 마시며 휴식을 하듯이, 에너지 충전을 위해 밥을 먹듯이 날마다 내 마음도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 “잘했어”, “수고 많았어”라고 말해 주고,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을 상담해 주듯 자신도 다정히 상담하여 나를 알아주고 챙겨주어야 한다.

나를 평가하고 충고하기보다는 공감하여 잘 들어주고 “힘들었겠구나”, “점점 좋아질 거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이 정도면 잘한 거야”라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나에게 건네주자. 잘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보고 스스로를 응원하고 존중해 줄수록 점점 더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게 되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며 살아가게 된다.

최신 판례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후 포괄양수도로 고용승계된 경우는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 안됨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소득-303, 2023.12.19

■ 질 의

- 질의인은 □□□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22.9월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라 구「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 질의인은 '23.4월 위 사업을 제3자에게 포괄양수도하면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시킴

질의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해당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시킨 경우에 사후관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제1항본문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

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함

서면법인-2493, 2023.12.27

■ 질 의

- (질의1) 렌탈사업을 위해 임대용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임대자산이 차량운반구 또는 비품이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질의1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임대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1]의 자산(귀 질의의 경우 차량 운반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총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한 후, 실제 비용이 지출되어 총당부채와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함

사전법규법인-866, 2024.04.02

Ⅰ 질 의

-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총당부채, 이연수익 및 SAT 조정 자산의 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양수법인의 세무조정 방법

Ⅱ 회 신

A법인이 특수관계인인 B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함에 있어 A법인이 양수 시 승계하여 부채로 계상한 '미래 예상비용에 대한 총당부채 및 마일리지 등을 제공함에 따른 이연수익'은 그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손금산입(기타)한 후, 실제 비용 지출 및 마일리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총당부채 및 이연수익과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또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회계상 매출로 인식함에 따라 계상한 매출채권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고 해당 매출채권에 대응하는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익금산입(유보)하며 동 차액(매출채권과 재고자산 가액의 차액을 말함)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법인세법상 손익인식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익금산입(유보, 매출채권 관련) 및 손금산입(△유보, 재고자산 관련)하는 것임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과세대상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법규부가-891, 2024.04.25

Ⅰ 질 의

- AAA(주)(이하 '질의법인')는 석유류 제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XX년 하반기부터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여 BBB에 판매
 - 바이오선박유는 질의법인에서 제조한 선박유(중유)와 해외에서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을 7:3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
- * 질의법인은 중국, 동남아에서 폐식용유를 원료로 제조한 선박용 바이오디젤 수입

질의

-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Ⅱ 회 신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서 석유대체연료로 규정되어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경유와 의무혼합하여 사용되는 재생에너지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정부, 내년부터 '직원 할인'도 본격 과세... 삼성전자, 1인당 250만원 추가 부담 예상

기업들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하나인 '직원 할인' 제도를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본격 과세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 직원의 경우 1인당 평균 250만원가량을 연간 근로소득세로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깨알 증세'를 추진한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세·상속세 등은 낮추고 근로소득세만 겨냥한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천 의원 추계 결과, A사 직원들은 1인당 평균 241만원씩 총 633억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B사는 82만원, C사는 60만원, D사는 52만원, E사는 35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B-E사 직원들이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 총액은 16억~148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직원 할인 혜택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세법상으로도 직원 할인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그동안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어 세금을 걷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천 의원은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면서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만 짊어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월 신청 농친 근로장려금,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격은 되지만, 지난 5월 정기 신청기간을 놓친 가구는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을 놓치면 더는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동시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 재산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 후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기업승계 등 상속세 지원에 '4조1602억원'...나랏돈 녹았다

기업 사주 일가 상속세 지원을 위해 만든 기업상속공제 지원액이 5년간 4조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상속공제는 원래 지역 소상공인 지원 제도였지만, 한국의 경우 전문경영인들보다 혈연 집단의 경영능력이 낮다는 믿음에서 중소기업 지원에서 중견기업 지원으로 확대됐다.

특정 혈연이 다른 혈연보다 우월하다는 건 전제군주제, 인종차별주의의 전형적 특성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업상속공제를 통해 감면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총 4조1602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업상속공제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0원이 된 건수는 최근 10년간 총 814건으로 금액은 4114억원에 달했다.

주된 수혜층은 중견기업이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103만960개 법인 가운데 상위 6.86% 이내에 해당하며, 중견기업 한 곳당 평균 매출은 867억원으로 중소기업 평균매출(23억원)의 37배가 넘는다.

임 의원은 "기업승계 지원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공제금액과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 기업상속공제가 '부자 감세'의 통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며 "기재부와 국세청이 함께 지금까지의 운영 실적을 면밀히 살펴 관리방안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국세청, 2024. 10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개정취지> 육아휴직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추 가>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소득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적용시기> 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개정취지> 출산·양육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상향



- | | |
|--|----------|
| ○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 (좌 동) |
| ○ (한도) 월 10만원 | ○ 월 20만원 |

<적용시기> 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8조)

<개정취지> 기술개발 유인 제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❶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❷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 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적용시기> 2024.1.1.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300만원~1,800만원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600만원~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이상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이상
고정금리 +	고정금리 또는	기타	고정금리 또는	고정금리 +	고정금리 또는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비거치식		비거치식	비거치식	비거치식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 자상환액 소득공제 ○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추 가>				<input type="checkbox"/>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 대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 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 도 포함			

<적용시기> (공제한도)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연장) 2024.1.1. 이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
 용
 (차입금 이전) 2024.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
 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소득세법 제59조의2)

<개정취지> 출산·보육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 ○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원 - 2명인 경우 :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대상) <추 가>	<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손자녀 추가 ○ (공제액) - (좌 동) - 2명인 경우 : 35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대상) - 손자녀

<적용시기> (공제액 상향) 2024.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공제대상 추가) 2024.1.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6)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를 한시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4)

<개정취지> 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input type="radio"/> (공제액)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margin-right: 5px;"> <input type="radio"/> (좌 동) </div> - 3천만원 초과 : 40%(2024.12.31.까지)

<적용시기> 2024.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7)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4항)

<개정취지>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세액공제 <input type="radio"/> (대상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 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추 가>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 (좌 동)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율) 15%○ (공제한도)<ul style="list-style-type: none">❶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❷ ❶ 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p>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ul style="list-style-type: none">❶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❷ (좌 동)
--	---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소득세법 제16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개정취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개정취지> 선원·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국외 근로자 : 월 100만원○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 월 300만원<input type="checkbox"/>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확대<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월 300만원 → 월 500만원<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추 가>

-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직원

<추 가>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2(5)에 따른 “행정직원”

- 산업인력공단 직원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 사택제공 이익 등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신 설>	<input type="checkbox"/>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 (좌 동)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❶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❷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 (법인령 §4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

<적용시기> 2024.2.29.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input type="checkbox"/> 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추 가>	<input type="checkbox"/>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input type="checkbox"/> (좌 동) </div>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②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25)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취지> 추징 및 반환 절차 간소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택차액 추가납입 후 사후관리* * 납입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 발생 시 추가 납입액을 연금계좌 불입액으로 보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추징)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 일반계좌에서 납입되었다면 원천징수 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 <input type="checkbox"/> (반환) 추징 후 남은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방식 변경 <input type="checkbox"/> 아래의 반환액을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소득세(15%) 부과 <input type="checkbox"/>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적용시기> 2024.2.29. 이후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

**(13)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취지> 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시 필요경비 산입한도 <input type="radio"/> (정치자금 및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 <input type="radio"/>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 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input type="radio"/>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input type="checkbox"/>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한도 및 순서 규정 <input type="radio"/> 고향사랑기부금 추가 - (좌 동) <input type="radio"/>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input type="radio"/>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적용시기> 2024.1.1.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4)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취지>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특례기부금의 범위 <input type="radio"/>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 <input type="radio"/> 특별재난지역을 복귀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❶ + ❷) ❶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 × 5만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범위 조정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좌 동) ❶ 5만원 → 8만원 - (좌 동)

② 자원봉사요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단서 신설>	<input type="radio"/> 자원봉사요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
--	--

<적용시기> 2024.2.29.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5)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취지> 자녀세액공제 확대 반영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정 및 확대 반영

<적용시기> 2024.3.1.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취지> 벤처투자 유인 제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대상) ①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③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추 가> ○ (소득공제) 출자금액의 10%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 margin-left: 10px;"><input type="radio"/> (좌 동) ④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input type="radio"/> (좌 동) -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출자</div>



[출자금액 ×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 투자비율*] × 10%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

○ (적용기한) 2025.12.31.

○ (좌 동)

<적용대상> 20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2024.2.29. 이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취지>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대상) ❶ 또는 ❷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❶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❷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추 가> ○ (감면율) 10년간 50% ○ (적용기한) 2023.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대상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 margin-left: 10px;"> ○ (좌 동) ㉤ (좌 동) -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 (좌 동) ○ 2026.12.31. </div>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개정취지> 조세회피 방지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인력 관련 특례* 적용 배제 요건 * ❶ (법 §18)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❷ (법 §18의2)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❸ (법 §18의3)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 판단 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닌 근로기간 중으로 확대 ○ 근로기간 중 외국인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개정취지>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내용) 19% 단일세율*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적용기간 연장 및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 (좌 동)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 (소득령 부칙)



- | | |
|--------------------------|---------------|
| ○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 ○ (좌 동) |
| ○ (적용기한) 2023.12.31. | ○ 2026.12.31. |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취지>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이행시 그 기간(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 ○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추 가> ○ (적용기한) 2023.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 margin-left: 10px;"> ○ (좌 동) - 컴퓨터학원 ○ 2026.12.31. </div>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개정취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적용기한) 2025.12.31.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 margin-left: 10px;"> ○ (좌 동) - 연 300만원 ○ (좌 동) </div>

<적용시기> 20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96조의6)

<개정취지>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종 전	개 정
<div><input type="checkbox"/>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div> <div><div><div><div>○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div><div>○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div><div>○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div></div><div>* 누적 납입금액의 6%</div><div><단서 신설></div></div><div><신 설></div></div>	<div><input type="checkbox"/>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div> <div><div><div>○ (좌 동)</div><div>-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div></div></div> <div><input type="checkbox"/> 청년형 장기펀드, 공모 부동산펀드* 전환가입 요건</div> <div><div>* 공모 리츠의 경우 전환가입 대상에서 제외</div><div><div>❶ 기존 펀드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적격펀드(동일계좌 유지)에 가입</div><div>❷ 기존 펀드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적격펀드에 납입</div><div>❸ 기존 펀드와 다른 적격펀드의 가입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div></div></div> <div>○ (적용기한) 2023.12.31.</div> <div>○ 2024.12.31.</div>

<적용시기> 2024.4.1.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8)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월세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좌 동) ○ 750만원 → 1,000만원 ○ (좌 동)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9)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취지> 내수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신 설>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공제한도 : 100만원) ○ (좌 동)

(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이자상환액, 금융·보험용역 관련 수수료·보증료 등 <p><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	--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2024년 귀속 분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안)
(2024.12월 국회 통과되면 확정)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신설)

<개정취지> 결혼비용 지원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세액공제○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공제금액) 50만원○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적용시기> 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개정이유> 출산·양육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과세 한도 폐지○ ❶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❷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❸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24년 수당 지급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개정취지> 조문 정비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input type="radio"/> (대상요건) 거주자의 직계비속 <input type="radio"/> (나이요건) 20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나이요건 명확화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20세 이하(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4)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개정취지> 세액공제 적용방법 합리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input type="radio"/> 다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 <input type="radio"/> (좌 동)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width: 100px; margin: 10px 0;"></div> <input type="radio"/>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시기> 20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개정취지>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종 전	개 정
<div><input type="checkbox"/> 특례기부금 단체<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추 가></div> <div><input type="checkbox"/> 일반기부금 단체<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추 가></div>	<div><input type="checkbox"/> 특례기부금 단체 추가<div><input type="checkbox"/> ○ (좌 동)</div><div><input type="checkbox"/> ○ 특례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div></div> <div><input type="checkbox"/> 일반기부금 단체 추가<div><input type="checkbox"/> ○ (좌 동)</div><div><input type="checkbox"/> 일반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div></div>

<적용시기> (특례기부금) 2025.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기부금)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2024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 (추가소비 소득공제) '23년 대비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20%로 2배 한시 상향
 - * (현행) 10% → 20%
 - (전통시장 소득공제) '24년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한시 상향
 - * (현행) 40% → 80%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및 일부 환원

- 국세청, 2024. 10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정부는 '24.10.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24.12.31.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 △122원/리터(ℓ), 경유 △133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단위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 세율	'21.11.12. ~ '22.4.30. △ 20%	'22.5.1. ~ 6.30. △ 30%	'22.7.1. ~ 12.31. △ 37%	'23.1.1. ~ '24.6.30. 휘발유 △ 25% 경유 △ 37% 부탄 △ 37%	'24.7.1. ~ 10.31. 휘발유 △ 20% 경유 △ 30% 부탄 △ 30%	'24.11.1. ~ 12.31. 휘발유 △ 15% 경유 △ 23% 부탄 △ 23%
휘발유	820	656 (△164)	573 (△247)	516 (△304)	615(△205)	656(△164)	698(△122)
경유	581	465 (△116)	407 (△174)	369 (△212)	369(△212)	407(△174)	448(△133)
액화 석유 가스 (LPG) 부탄	203	163 (△40)	142 (△61)	130 (△73)	130(△73)	142(△61)	156(△47)

* ()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0.23.~24.),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0.29. 예정) 등을 거쳐 '24.1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고시 등 후속조치]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10.23., 09:00)하였다.(☞참고1)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시정명령(제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26조) 등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25.1.31.까지 받을 예정이다.

참고 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개별소비세법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령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바목에 규정된 과세물품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과세물품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수출입업자(이하 “석유



수출입업자”라 한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라 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라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 ① 석유정제업자는 2024년 10월중 반출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3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20%를, 2024년 10월중 반출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3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석유수출입업자는 2024년 10월중 수입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수입물량이 2023년 같은 기간 석유수출입업자가 판매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2024년 10월중 수입신고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수입신고 물량이 2023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물량의 1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2024년 1월 1일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간,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간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제4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간 지위승계가 있었을 경우, 고시 제4조제1항의 “2023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 같은 조 제2항의 “2023년 같은 기간 석유수출입업자가 판매한 물량” 및 같은 조 제3항의 “2023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물량”은 지위승계 이전 각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2023년 10월에 반출·판매 또는 수입한 물량의 합으로 한다.
- ⑤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수출물량 급증, 생산설비 신·증설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 등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

전사업자는 2024년 10월 중 제2조 각 호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시·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수입물량 보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자에 대해 2023년 10월 및 2024년 10월 중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8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참고 2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

구 분	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9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02-2133-3711
부산광역시	첨단산업국 미래에너지산업과	051-888-4695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 에너지산업과	053-803-4925
인천광역시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32-440-4344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62-613-3793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 에너지정책과	042-270-0431
울산광역시	경제산업실 에너지산업과	052-229-6492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관리과	031-8030-4242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 에너지정책과	033-249-2972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에너지과	043-220-3282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탄소중립경제과	041-635-3470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 청정에너지수소과	063-280-3236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 에너지정책과	061-286-7262
경상북도	에너지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54-880-2497
경상남도	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55-211-2294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64-710-4416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044-300-4055
한국석유공사	-	1688-5142
석유관리원	-	1577-7055
한국소비자원	-	1372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 2.까지 신청

- 국세청, 2024. 10

-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 2.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신청기간별 장려금 수급액

기 간 >	정기신청 2024. 5. 1.~5.31.	기한 후 신청(6개월) 2024. 6. 1.~12.2.	기한후신청 경과 2024. 12. 3. 이후
장려금 >	100% 지급	95% 지급	신청불가

- (지급)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 (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



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상담)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평일 9~18시)하거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평일 및 휴일 24시간)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담 시 알려드리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3]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 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의·중대한 과실은 2년,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참고 1 - 신청자격 및 지급액

☐ 신청자격

- ▶ 20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가구 유형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부부합산)		재산 요건
	2023.12.31.기준	2023년 연간 총소득*		2023.6.1.기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홀벌이 가구	①배우자, ②18세 미만 부양자녀, ③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3,2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23년 소득 발생분부터	④가구원 전체의 재산(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1.7억원 이상, 2.4억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백만원	3,800만원 미만	4,000만원 → 7,000만원)	미만 → 장려금 50%만 지급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2,200만원 미만	-	

* 2023년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합산한 금액

-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총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
- ② '05.1.2. 이후 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
- ③ '53.12.31. 이전 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 가족)

※ 다만,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같이 사는 경우 ②, ③연령제한 없음

- ④ 부동산·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 합계액

☐ 지급액 ('23년 소득 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80만 원 → 100만 원)

| 전세금 가액 평가 사례 |

☐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한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백만 원 VS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7천만 원
⇒ 전세금: 5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과 간주전세금 7천만 원 중 적은 금액)
-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백만 원 VS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7천만 원
⇒ 전세금: 7천만 원 (보증금 1억 원과 간주전세금 7천만 원 중 적은 금액)

☐ 부모님 소유 집을 임차한 경우

- 보증금 3천만 원 또는 무상 VS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 1.3억 원
⇒ 전세금: 1.3억 원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 국세청, 2024. 10

주요 내용

◆ 금감원은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하였습니다.

- √ 금번 사전통지 대상은 주기적 지정 506사, 직권 지정 728사 등 총 1,234사로 전년 10차 사전통지(1,261사) 대비 27사(2.1%) 감소하였습니다.
-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는 상장사 178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6사가 신규 지정되었으며,
- 직권 지정의 경우 상장예정 238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53사, 관리종목 14사 등이 신규로 지정회사에 포함되었습니다.

◆ 지정회사의 편의제고를 위해 회사가 직접 지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조회기능을 마련하였습니다.

- √ 금번 사전통지부터, 회사가 직접 지정내용 및 ‘분산지정*’에 따른 주기적지정 이월 대상 여부 등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기적 지정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회사 수를 일정하게 분산하여 지정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을 통한 조회방법은 (붙임3) 참고

◆ 회사 및 감사인은 독립성 훼손 등 재지정 요청사유를 검토하여 사전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 √ 금감원은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24.11.12일 본통지 예정이며, 회사 및 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I 개 요

-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외감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이하 '10차 사전통지')를 실시
 - 본통지(11.12일)의 사전단계로 회사와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하여 '25사업연도 주기적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회사를 선정

지정제도 개요 (붙임1 참조)

- ◇ (주기적지정)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는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 ◇ (직권지정) 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 발생 시 외부감사인을 지정

II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 현황

1 사전통지 전체 현황 (1,234사)

- 금번 10차 사전통지한 회사는 총 1,234사(상장 909사*, 비상장 325사)로 전년 10차 사전통지(1,261사[상장 937사+ 비상장 324사]) 대비 27사 감소
 - * 유가증권시장 320사, 코스닥시장 561사, 코넥스시장 28사
- 이중 540사는 '24년에 지정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회사이며, 694사는 이전에 발생한 지정사유 등에 의한 2년차 이상 연속지정* 회사임
 - * 유가·코스닥 상장회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지정사유 발생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이 지정됨

'24.10월 사전통지 현황

(단위: 사)

구분	상장(a)			비상장(b)			합계(a+b)		
	신규	연속	소계	신규	연속	소계	신규	연속	소계
주기적지정(①)	178	299	477	6	23	29	184	322	506
직권지정(②)	103	329	432	253	43	296	356	372	728
합 계(①+②)	281	628	909	259	66	325	540	694	1,234



2 주기적 지정 현황 (506사)

□ (신규 지정: 184사) 상장사 178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6사 등 184사**가 신규 지정

* 12월말 외 결산법인으로 既 지정된 4사 포함시 금년 중 주기적 지정은 182사

** 주기적 지정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회사 수를 일정하게 분산하여 지정(분산지정)

◦ 신규 지정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별도재무제표 기준)는 1.0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2.2조원, 코스닥시장은 2,830억원 수준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7사, 5천억~2조원: 39사 등

□ (연속 지정: 322사) '22~'23년 주기적 지정대상이 된 322사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을 2~3년차 감사인으로 연속 지정

3 직권 지정 현황 (728사)

□ (신규 지정: 356사) 금년 신규 직권 지정사유 발생 회사는 상장사(유가 16사, 코스닥 63사, 코넥스 24사) 103사, 비상장사 253사 등 총 356사

◦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 238사(신규 지정의 66.9%),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53사(14.9%) 등의 順

□ (연속 지정: 372사) 既 지정대상인 총 372사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사유 발생시 새로운 감사인으로 변경 지정

신규 감사인 지정 현황(사전통지)

(단위: 사, %)

신규 지정사유*		회사 수			
		'24.10차	'23.10차	증감(증감율)	
주기적지정		184	183	1	(0.6)
직권 지정	상장예정	238	202	36	(17.8)
	재무기준(3년 연속영업손실 등)	53	74	△21	(△28.4)
	관리종목	14	16	△2	(△12.5)
	최대주주(3년간 2회) /대표이사(3회) 변경	19	15	4	(26.7)
	감리조치	22	20	2	(10.0)
	기타	10	25	△15	(△60.0)
	소 계	356	352	4	(1.1)
합 계		540	535	5	(0.9)

* 지정사유가 중복된 회사의 경우 대표지정사유 표기

III 회사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1 회 사

□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 ① (의견제출) 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군(群) 재지정 등 재지정요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 (또는 본통지 1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

* (붙임2) 감사인 재지정 사유 참조

- 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은 지정 1년차 회사가 1회만 가능하고, 특히 하향 재지정은 지정사유에 따라 재지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지정 신청가능 지정사유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요청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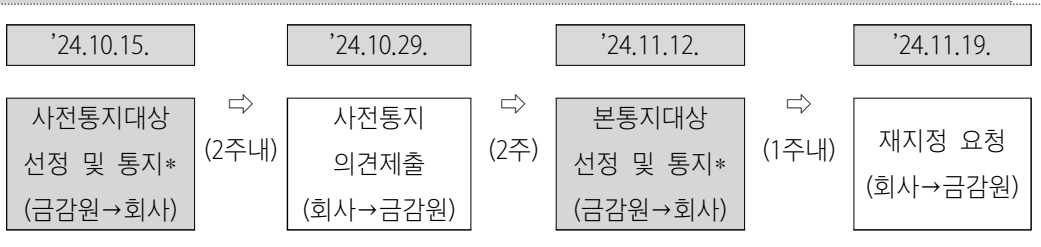
* 하향 재지정은 회사요청, 주기적 지정 및 상장예정 사유에 의한 지정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과 관련한 의견은 가급적 회계법인을 통해 일괄적으로 제출

- ② (제출방법)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 공문과 재지정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사전통지에 포함된 안내문 참조)

- ③ (계약체결)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사전통지 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참고]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5년 사업연도 지정 예상 일정



* 선정 이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약 2~3일 후 수령 예상



2 외부감사인

-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 요청
- 또한, 감사인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준수하여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활히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

[참고] 모범규준 주요내용

- ◆ 감사인력 · 시간 · 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 · 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 ◆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 ◆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IV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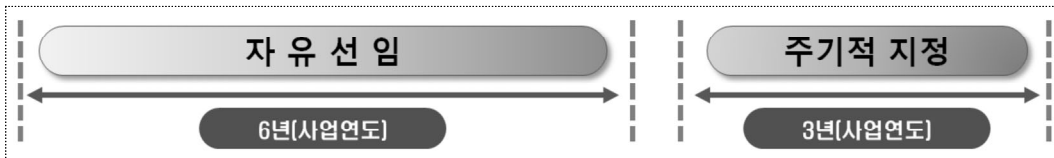
-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11.12일에 본통지 예정
 - 회사 및 지정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
 - 다만, 기한내(2주) 계약체결이 어려워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는 등 지정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참고로, 금감원은 지정대상 회사의 편의 제고를 위해 금번 사전통지부터 지정내용을 우편발송하는 동시에,
 - 회사가 직접 지정사유, 지정감사인, 지정기간 및 ‘분산지정’에 따른 주기적지정 이월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기능*을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 추가하였음
 - * (붙임3) 감사인 지정결과 등 조회방법 안내

붙임 1 - 감사인 지정제도

① (제도개요) 감사인 지정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 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임

- (주기적 지정)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금감원)에서 지정함

*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원(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은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50% 이상 &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 (직권 지정)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직권 지정사유) 감사인을 지정

* 新외감법 개정으로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장사 등 직권 지정사유가 확대

구 분	주요 직권지정 사유
기존 지정사유	①상장예정법인, ②감사인 미선임, ③감리결과 조치, ④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⑤관리종목, ⑥횡령·배임 발생 등
신설	①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사, ②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③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④지정기초자료 미제출 ⑤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 負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1미만) ⑥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등

* 볼드체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지정사유

② 지정시기 (외감법 시행령 제17조, 외감규정 별표 2)

- (주기적 지정)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12월 법인은 '24.9.1.) 기준으로 주기적 지정대상을 선정하여,
- 익월(12월 법인은 10월) 중순경 다음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결과를 사전통지*하고,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4주 후에 본통지*

*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수령은 추가 시일이 소요

- (직권 지정) 원칙적으로 주기적 지정과 동일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감사인 지정 요청일 등 지정대상 선정일의 익월 중순에 해당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결과를 사전통지

* 상장예정법인, 회사요청,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등

③ 감사인 지정방법 (외감규정 별표 4)

- 지정감사인이 특정*된 경우에는 자산순서와 상관없이 우선 지정하고, 그 외에는 감사인(회계법인)별 지정점수**에 의해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 지정

* 주기적 지정의 2, 3년차 연속지정 등

$$\text{** 감사인 지정점수} = \frac{\text{감사인 점수}}{1 + \text{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 수1)}$$

1) 지정받은 회사의 자산총액 가중치 : 2조원 이상인 경우 3배, 5천억원 ~ 2조원 2배

<지정방식 예시>

지정대상회사				지정감사인		
회사명	자산규모	지정군	연속지정	회계법인명	감사인지정점수	지정군
A사	20백억원	다	-	I 법인	100,000 점	가
B사	15백억원	다	-	II 법인	95,000 점	가
C사	12백억원	다	-	III 법인	90,000 점	가
D사	9백억원	라	-	IV 법인	80,000 점	나
E사	8백억원	라	II 법인	V 법인	75,000 점	나
F사	5백억원	라	-	VI 법인	70,000 점	나

→ ① 우선지정 - - - - - ② 자산순 지정

붙임 2 - 감사인 재지정 사유(외감법 시행령 제17조)

※ 아래 ①, ②, ③의 재지정 사유는 지정 1년차에 1회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지정사유에 따라 동일 감사인이 지정된 지정 2·3년차에는 동 사유로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음

①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상향 재지정)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가군을 재지정요청	나군 이상을 재지정요청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
나군	나군	가군	-	-

다군	나군	가군	-	-
	다군	가군	가~나군	-
라군	나군	가군	-	-
	다군	가군	가~나군	-
	라군	가군	가~나군	가~다군

②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하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하향 재지정)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나군을 재지정요청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	라군 이상을 재지정요청
나군	가군	나군	-	-
다군	가군	나군	나~다군	-
	나군	-	다군	-
라군	가군	나군	나~다군	나~라군
	나군	-	다군	다~라군
	다군	-	-	라군

※ 다만, 하향 재지정은 회사요청, 주기적 지정, 상장예정 사유에 의한 지정인 경우에만 요청가능

③ 지정받은 회계법인과 동일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동일군 재지정)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가군을 재지정요청	나군을 재지정요청	다군을 재지정요청	라군을 재지정요청
나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	-	다군	-

라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	-	다군	-
	라군	-	-	-	라군

- ④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
- ⑤ 연결 지배·종속회사(둘다 지정감사시)가 동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⑥ 회생절차 진행중인 회사가 법원이 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요청하는 경우
- ⑦ 외국인투자자 출자회사로서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등

통	화	명	10월 25일 (금)	10월 28일 (월)	10월 29일 (화)	10월 30일 (수)	10월 31일 (목)
미	달	러 (USD)	1380.50	1384.40	1387.00	1383.10	1383.30
일	본	엔 (JPY)	910.26	905.75	904.67	902.60	902.20
영	국	파 운 드 (GBP)	1790.78	1794.25	1798.87	1799.97	1792.76
캐	나	다 달 러 (CAD)	996.43	996.29	998.34	994.00	994.64
홍	콩	달 러 (HKD)	177.67	178.15	178.47	177.98	177.99
위	안	화 (CNH)	193.66	194.43	194.17	193.29	193.56
유	로	화 (EUR)	1494.18	1494.94	1499.76	1496.58	1502.19
호	주	달 러 (AUD)	915.48	914.81	912.85	907.11	909.45
싱	가	폴 달 러 (SGD)	1046.78	1046.57	1048.65	1044.80	1046.3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17.50	318.99	318.05	316.21	315.89